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보도	'21.3.11.(목) 16:00	배포	'21.3.11.(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최 용 호(02-2100-2601)		담 당 자	김민석 사무관(02-2100-2518) 이용준 사무관(02-2100-2516)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 김 충 우(02-3145-5550)			한재혁 부국장(02-3145-558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박 봉 호(02-3145-5650)			임형조 팀 장(02-3145-5636)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 최 광 식(02-3145-5100)			서현재 팀 장(02-3145-5107)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지 천 삼(02-3774-9002)			이승범 부서장 (02-3774-9020) 이국철 부서장 (02-3774-9140)	

제 목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함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 '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개최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

- 현재 거래소 심리 17건(2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12건(2월 신규착수 5건)이 진행중입니다.
- 2월 중 증선위는 20명, 1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7명, 12개사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관련]

- 증선위는 올해 초에만 (~3.10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합계: 약 6.4억원)
-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 **위반사례·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반사례 등 세부내용은 본문 참고

--

1 조심협 개요

□ 3.11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1년 제 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 조심협은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증가 등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기존 분기별 개최 원칙을 **매월 개최로 변경**하여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

-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2 심리·조사 현황

(1) 시장감시 및 심리

※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 → 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 → 수사 및 기소(검찰) → 재판"으로 진행

[시장감시]

구 분		'21.1월	'21.2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308건	170건
	투자경고	37건	22건
	투자위험	2건	1건
	소 계	347건	193건
예방조치 (서면·유선경고, 수탁거부 등)		234건	180건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388개 종목	406개 종목

□ 1월에 비해 2월에 **시장경보·예방조치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 시장경보: 단기급변 및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감소

예방조치: 이상거래(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단주매매 등) 계좌 감소

□ 다만,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코로나19, 언택트, 정치(재·보선)** 등 테마주는 388개 → 406개로 **증가**했습니다.

[심리]

	'21.1월	'21.2월
신규착수	18건	14건
종결	9건	16건
진행중	-	17건

- ☐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2월 중 신규착수 14건)
- ☐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소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 관계기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심리·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해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사 및 조치

		'21.1월	'21.2월
조사 진행중		-	112건
착수		25건	5건
종결		14건	16건
조치	고발	5명	15명 1개사
	통보	7명	5명
	과징금	2명	4명
	과태료·주의·경고	0명	3명 12개사
	합계	14명	27명 13개사

* 조사 진행·착수·종결 : 사건 수 기준

** 조치 : 대상자 수 기준 (한 사건 내에 여러 명의 조치 대상자가 있을 수 있음)

- ☐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 당초 계획대로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주요 이슈 :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 올해 초 (~3.10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6.4억원, 각 2,250만원 ~ 2.1억원)

* '19~'20년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치 건수 : ('19년) **1명**, ('20년) **0명**

※ [참고] **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이상 협의의 불공정거래)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 2·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행위와 같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 (정보이용형과 시세관여형 두 가지로 분류)

❶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1항)

- 미공개정보 관련 **내부자·준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니더라도 (이 경우 미공개정보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거나,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된 자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경우

❷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항)

- 타인의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를 조종할 **목적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이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되지 않음),
- **대량의 허수주문 제출, 가장·통정매매, 풍문의 유포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투자자들이 **“내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허수주문(주문제출·취소)이나 가장매매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 **결국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내)

- 올해 초 과징금이 부과된 주요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권사 ETF(상장지수펀드) 이벤트 상금 취득 목적의 가장매매*

* 가장매매: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거짓으로 꾸민 매매

- 다수의 증권사들은 ETF 거래금액이 많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ETF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 예) 특정 ETF상품을 xx억원 이상 거래하는 선착순 xx명에게 상금 xx만원 지급

- 조치대상자들은 가족·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확보한 뒤 계좌들 간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가장매매)시키는 방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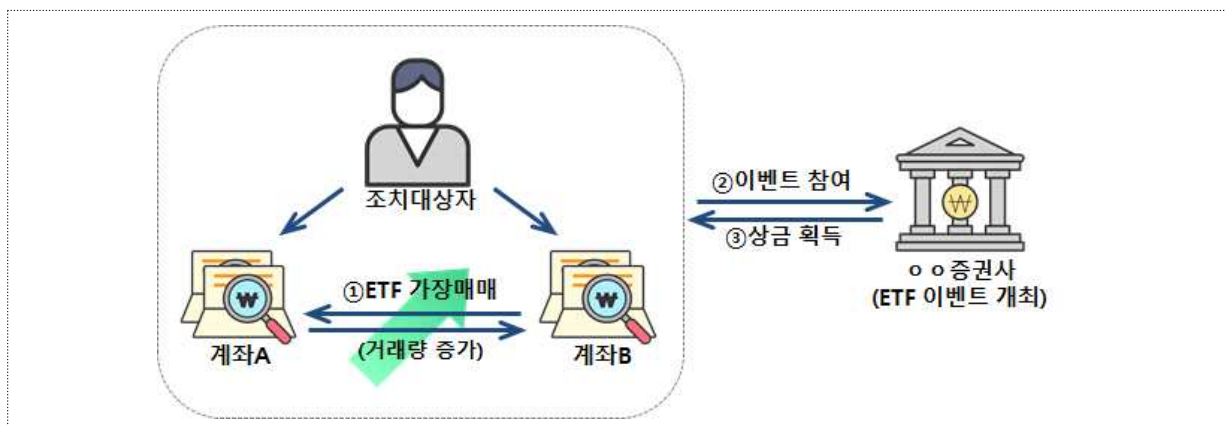
* 조치대상자 3명은 각각 약 200~300만주씩 가장매매

- 100여 차례 ETF 이벤트에 참여하여 1인당 2~3억원 수준의 상금을 획득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가장매매가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동 종목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과징금액: (A)1.5억원, (B)2.1억원, (C)1.9억원

(조치대상자 A~C가 매매 자체에서는 거래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획득한 상금"에서 "거래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산정)



[사례① 관련 조문]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 획득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수주문 제출

* 주식 선물(Futures) : 만기 도래 시 체결가격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기로 하는 계약

- 주식 선물은 100원에 매도계약을 해 놓고, 90원에 매수계약을 하면 10원의 청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이 상계되어 청산됨

- 조치대상자는 이러한 매도·매수 포지션 청산을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허수주문(주문 후 취소)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매도 포지션 구축>

- ① : 시세(예 : 90원)보다 약간 높은 가격(100원)에 매도주문
- ② : 대량의 매수주문(90원) 제출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
- ③ : 시세가 상승하면서 ①의 매도계약(100원) 체결
- ④ : 매도가 체결된 직후 ②의 매수주문 취소



<매도 포지션 구축 직후, 유사한 방식으로 매수 포지션을 구축>

- ⑤ : 시세(100원)보다 약간 낮은 가격(90원)에 매수주문
- ⑥ : 대량의 매도주문(100원) 제출 (매도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
- ⑦ : 시세가 하락하면서 ⑤의 매수계약(90원) 체결
- ⑧ : 매수가 체결된 직후 ⑥의 매도주문 취소



<매도와 매수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이익 획득>

결국 100원에 구축한 매도 포지션을, 90원의 매수 포지션으로 청산한 것으로, 계약당 10원 (100원 - 90원)의 청산 이익 획득

- 조치대상자는 5개 주식 선물 종목에 대해 수천 회에 걸쳐 허수성 주문을 제출한 후 취소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허수성 주문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③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등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주문 반복

* 시가 단일가매매 : 장 개시 전 30분 간(8:30~9:00) 동시호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

-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투자자들이 제출한 매수·매도 호가 및 수량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예상체결가”가 표기됩니다.
- 조치대상자는 보유주식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고 (예상체결가 상승)

*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가격변동성이 높은 우선주를 대상으로 함

- 조금 뒤 매수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등 허수주문을 반복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0여만 주 허수주문)
- * 뿐만 아니라 조치대상자는 장중에도 거래 성립 가능성이 낮은(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
- 증선위는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을 통해 예상체결가 등을 변동시키는 것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2,250만원)했습니다.



[사례②, ③ 관련 조문]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투자자 유의사항]

-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거래는 그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①~③) 역시 주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 ①이벤트 상금 획득을 위한 반복적인 가장매매,
②매수·매도 양쪽 방향으로의 반복적 허수주문,
③장 개시 전 대량의 동시호가 제출 후 취소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것이 인정되어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 투자자들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구분 (괄호 안은 자본시장법 조항 표시)

구 분	내 용	제재
미공개정보이용 (제 174조)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형벌 - 징역 1년 이상 - 벌금 부당이득의 3~5배
시세조종 (제 176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부정거래 (제 178조)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 부실표시 등)	*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논의 중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 178조의2)	<p>[정보이용형] (제 178조의2 제1항) 내부자·준내부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p> <p>[시세관여형] (제 178조의2 제2항) -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1~3호) - 풍문의 유포, 거짓 계책 등으로 수요·공급 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4호)</p>	행정제재 (과징금) - 부당이득의 1.5배 이내

②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 일반적으로 '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권위) → 수사·기소(검찰) → 판결(법원)' 순으로 진행

